

#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

(2023. 1. 19. 입법예고)

## 1 주요 개정 내용

### □ 거짓진술, 직무집행 거부·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(국기형)

#### < 법률(국기법§88) 개정내용 >

◇ 탈세 방지를 위해 거짓진술, 직무집행 거부·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(최대 2천만원 → 5천만원)

-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
-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,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\*하여 최대 5천만원 부과

\*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.1%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

### □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(국기형)

구분	현행	개정안
혈족	6촌 이내	4촌 이내
인척	4촌 이내	3촌 이내
그 외	·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 포함) · 친생자가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	· (추가)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

※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혈족 6→4촌, 인척 4→3촌 등으로 기 개정('22.12.27. 공포)

### □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(국징형)

#### < 법률(국징법§109) 개정내용 >

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,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

·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-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,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

**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(소득령)**

-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(연금저축, 개인형퇴직연금 등) 추가납입(누적 한도 1억원) 허용

구분	내 용
대 상 자	부부 중 1명 60세 이상 & 부부 합산 1주택자 *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
대상주택	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(종전주택 기준)
납입금액	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* 1억원 한도(생애 누적)
납입기간	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
사후관리	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(5년간 사후관리)

**□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\*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(소득령)**

- \*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(단순경비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
-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\*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,400만원→3,600만원 미만으로 상향
- \* 쿼서비스배달원,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, 학습지방문강사 등

**□ 일시적 2주택 양도세·종부세 특례\* 처분기한\*\* 연장 (소득령·종부세령)**

- \* (양도세)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(최대 80%) 적용  
(종부세) 기본공제 12억원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(최대 80%) 적용
- \*\* (양도세) 종전·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, 그 외 3년, (종부세) 2년

-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,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

※ 적용시기: (양도세) '23.1.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
(증부세) '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

#### 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(소득형)

-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\*를 배제하는 기한을 '23.5.9.에서 '24.5.9.까지로 1년 연장

\* 중과세율: (2주택) 기본세율+20%p (3주택 이상) 기본세율+30%p,  
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: 미적용

#### □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\*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(소득형)

- \* 임대료 인상률(5% 이하), 임대기간(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+ 상생 계약 2년 이상)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(최대 80%) 2년 거주요건 면제
-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\*에 해당 시 종전·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

\*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

#### □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\* 확대 (소득형)

- \*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,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, 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→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
- 3개 업종(앰블런스 서비스업, 낚시어선업, 스터디카페)을 추가(197개→200개 업종)

□ **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\* 확대 (소득령)**

- \*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
- 현금매출 비중,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**13개 업종\***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(112개→125개 업종)
- \* 백화점, 대형마트, 편의점, 서적·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, 육류 소매업, 자동차 중개업, 주차장 운영업, 통신장비 수리업,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

□ **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의무 강화(부가령·소득령)**

-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**1억원 → 8,000만원 이상** 개인사업자로 확대('24.7월 시행)
-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**계속하여** 발급 의무 부여('23.7월 시행)
- \*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

□ **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·방법 구체화 (소득령, 법인령)**

< 법률(소득법§163의3, 법인법§121의2 ) 개정내용 >

◇ **매입자발행계산서\* 제도 신설**

- \*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·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('23.7월 시행)
- 발행대상,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위임

- **(대상)** 건당 공급가액 **5만원 이상** 거래
- **(절차)**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 신청(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) →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→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행

□ **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\* 운용가능재산 확대 (조특령)**

\*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·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(농어민·서민형은 400만원)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, 그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
-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-OTC 주식(중소중견기업) 추가

□ **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(조특령)**

- 월세 세액공제(최대 17%, 연 750만원 한도)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\*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

\* (현행)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

□ **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(조특령)**

-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·통일\*

\* 통합고용세액공제(신설),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,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

□ **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**

< 법률(조특법§104의5) 개정내용 >

- ◇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(적용기간: '24.1.1.~'25.12.31.)
  - ▶ 연간 한도 300만원(세무·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), 최소공제액 1만원
  - ▶ ①대상 사업자, ②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

① (대상 사업자)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

② (공제금액)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× 200원

**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(조특령)**

**< 법률(조특법§99의4) 개정내용 >**

- ◇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**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완화**
  - ▶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**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**

-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\*은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

\*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: 태안군, 영암군, 해남군

**지방 저가주택(중부세) 및 농어촌주택(양도세) 특례\* 적용 확대 (중부세령·조특령)**

\* 공시가격 3억원 이하 &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·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부세·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

-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\*은 특례 적용

\* 지방 저가주택: (현행) 규정없음 → (개정) 연천군·용진군·강화군 신설  
농어촌주택 : (현행) 연천군·용진군 → (개정) 강화군 추가

## **2 추진일정**

- '23.1.18.(수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'23.1.19.(목)~2.3.(금), 입법예고
- '23.2.21.(화), 국무회의
- '23.2월말, 공포